

## 〈참고〉 최근 가계부채 주요이슈 관련 QA

「이슈 ①」

### ◆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데?

현 정부 들어서('22.2Q~'23.2Q)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되었고,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% 수준으로,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.

\* 가계부채 증가율(%) : (과거 10년 연평균) +6.6 vs (현정부('22~'23))  $\Delta$ 0.0

(단위 : 조원)

	'03.1Q~'07.4Q (노무현정부)	'08.1Q~'12.4Q (이명박정부)	'13.1Q~'16.4Q (박근혜정부)	'17.1Q~'22.1Q (문재인정부)	'22.2Q~'23.2Q (윤석열 정부)
가계부채 규모	665.4	963.8	1,342.5	1,862.9	1,862.8
기간중 증가액	+200.7	+298.4	+378.7	+520.4	$\Delta$ 0.17
월평균 증감폭	+3.3	+5.0	+7.9	+8.7	$\Delta$ 0.01
연평균 증가율	+7.9%	+7.7%	+9.3%	+6.5%	$\Delta$ 0.0%

\*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

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월~10월 증가폭도 월평균 +3.7조원으로,  
i)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'20~'21년(+9.7조원)의 38%,  
ii)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(+7.4조원)의 절반 수준입니다.

\*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(조원) :

**['23.4~10월]+3.7 < ['20~'21 4~10월]+9.7** [과거 9년간 4~10월]+7.4

「이슈 ②」

◆ **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데?**

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,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, 이는 '03~'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만에 최초입니다.

\*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: ('21)105.4% → ('22)104.5% → ('23.1Q)**101.5%**

■ **90년대 중반 이후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**

① ('98→'99년) 42.1% → 41.2% : 외환위기 영향

② ('03→'04년) 61.9% → 59.5% : 카드사태 영향

**두 차례에 불과하며, 모두 상당수준의 경제위기에 기인**

→ **경제위기 없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**

**'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최초의 사례임**

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당시 상당기간 가계부채 감축이 이뤄진바 있으나 취약계층 주거불안, 급격한 경기위축, 재정악화 등 극심한 부작용이 수반되었습니다.

\* 글로벌 금융위기시('08→'10)

美 주택차압률 : 1.84% → **2.21%** 실업률 : 7.3 → **9.3%**

\* 코로나 위기시('19→'20)

美 국가부채 비율(GDP대비) : 103.6% → **130.4%**

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,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.

\* GDP대비 가계부채가 100% 초과한 국가가 100%이내 하락까지 통상 20여년 소요

① 네덜란드는 18.5년('03년~'21년), 덴마크는 17.7년('04년~'21년) 소요

② 스위스는 23년('99년~), 호주는 17년('05~)간 100% 초과 중

「이슈 ③」

◆ **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?**

①금융회사 건전성, ②가계 상환능력, ③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합니다.

- ①(금융회사 건전성) ①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,  
②연체율도 과거('13년 저축은행 부실 등) 대비 1/5~절반이하 수준

<업권별 자기자본비율('23.2Q)>		<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('13→'23.2Q)>	
[은행] 15.6%	> 규제비율 10.5%	[은행] 0.76% → 0.33%	(절반 이하)
[저축] 14.2%	> 규제비율 7.0~8.0%	[저축] 21.7% → 5.12%	(1/5 수준)
[상호] 8.0%	> 감독기준 2.0% (새마을4% 농협6%)	[상호] 3.38% → 1.43%	(절반 이하)

- ②(가계 상환능력)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으며,  
주택담보대출 LTV도 44.6%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중

- \* 고신용 차주 가계대출 비중(한은) : ('16년말)65.7% → ('23.1Q)77.7%
- \* 주담대 평균 LTV : (한국) 44.6% < (미국)71% (영국)69% (네덜란드)53%

- ③(국제기구 평가) IMF,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도 우리나라  
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

- "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나, 금융자산과 소득이 견고해 시스템 리스크는 작음" (IMF, '23.10.14)
- "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오랫동안 주목해 왔던 부분이나, 금융에 구조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" (Fitch Ratings, '23.10.20)

「이슈 ④」

◆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증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?

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('23.3.), 특례보증자리론 공급('23.1.)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중이며,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수준도 과거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중입니다.

\* 가계부채 증가율(%) : (과거 10년 연평균) +6.6 vs (현정부('22~'23)) **+0.0**

\* 주담대 평균 LTV(%) : (과거 8년 평균)49.1 vs (현정부('23.6월)) **44.6**

주택가격 급등기('20~'21)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하였으나, '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입니다.

	'17년 이전	'20~'21년	현재
규제지역 다주택자 LTV	70%	0%	30%
1주택자 LTV	70%	20~50%	50%

특례보증자리론은 서민·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,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으며

\*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규모(조원) : ('15)54.2 ('19)35.6 ('20)40.7 → ('23.1~10월)**41.7**

↳ ① '15년 : 1차 안심전환대출    ② '19~'20년 : 2차 안심전환대출

금년초 금리급등·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·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습니다.

\*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신규취급 비중(%) : ('21.3Q)44.5 ('22.3Q)50.1 → ('23.2Q)**75.2**

## 참 고

## 대출규제 정상화 및 정책모기지 공급추이

### 1.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

구 분		~17년	'18년 ~ 19년	'20년 ~ '21년	현재	비고
DSR		-	· DSR 관리지표 도입('18.10)	· 차주단위 규제(40%) · 9억원 초과 주택('19.12) · 2억원 초과 대출('22.1) · 1억원 초과 대출('22.7)	· DSR 산정만기 제한('23.9) ·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예정('23년중)	· 규제 기초 · 엄정히 유지
LTV	규제	[다주택자] 70%	[다주택자] 0% [1주택자] 40%~60%	[다주택자] 0% [1주택자] 20%~50%	[다주택자] 0% → 30% [1주택자] 20%~50% → 50%	· 주택가격 급등기 · 도입된 규제 정상화 · '17년 이전 대비 · 엄격한 수준
	비규제	[1주택자] 70%	[다주택자] [1주택자] 60% 70%			
전세 대출		제한 없음	[제한대상] · 다주택자 ·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 (· 쉼지역) 9억 초과 · 주택보유자(HF·HUG)	[제한대상] · 다주택자 ·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 (· 쉼지역) 9억 초과 · 주택보유자(HF·HUG+SGI) · (투기·투과) 3억초과 APT	[제한대상] · 다주택자 · <폐 지> · <폐 지> · (투기투과) 3억초과 APT	· 실수요자에 대해 · 제한적 규제완화
기타 주담대 규제		제한 없음	· 생안자금 1억원 한도 (구입용도 전용금지) · (규제지역) 최대 2년내 전입 · 처분 요건 ·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 i) 투기·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한도 ii)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 전입의무 iii) 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iv)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	· 생안자금 1억원 한도 (구입용도 전용금지) · (규제지역) 6개월 내 전입 · 처분 요건 ·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 i) 투기·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한도 ii)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 전입의무 iii) 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 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iv)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· 투기투과15억초과APT 주담대금지	· 생안자금 구입용도 전용금지 · <폐 지> · <폐 지> · <폐 지>	· 주택가격 급등기 · 도입된 규제 정상화

### 2. 최근 10년간 정책모기지 공급추이(조원)

구 분	'14	'15	'16	'17	'18	'19	'20	'21	'22	'23.10
합계	12.9	54.2	32.0	23.3	14.4	35.6	40.7	27.8	18.6	41.7
보증자리	2.5	10.3	14.4	10.7	7.6	19.7	26.8	23.3	10.5	19.2
적격대출	10.5	12.3	17.6	12.6	6.9	8.5	4.3	4.5	1.5	10.6
안심전환	-	31.7	-	-	-	7.4	9.6	-	6.5	11.9

「이슈 ⑤」

◆ **가계부채 관리강화 정책과 최근의 소상공인·서민층 지원 강화가 상충되지 않는지?**

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·취약계층 등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고,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분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\* 취약차주 대출금액(조원, 한은) : ('19.6.)85.9 → ('23.6.)95.2  
↳ 다중채무자 + 저소득(하위 30%) or 저신용자(신용점수 664점 이하)

\* 가계부채 평균 DSR(%) : ('19)36.5 → ('22)40.6

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·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 
①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, ②경제적 재기를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질적관리에도 상당히 도움되며,

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,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,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\* 정책 서민금융 : 연간 약 10조원 (가계부채 총액의 0.5% 수준)